

# “내년 지방선거 캠프 명당자리 선점하라” 광주 단체장 등 출마예정자들 ‘전초기지’ 마련 분주 당선자 배출 ‘목 좋은’ 선거사무소 확보 경쟁 치열

내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주 단체장·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출마 예정자들이 일찌감치 ‘명당(明堂)’ 선거사무실을 선점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사무소는 예비후보등록 이후 설치 가능한 만큼 각 후보군들은 자신의 출마 예정지에 ‘임시 거점’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명당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6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황현택·장재성 시의원(서구청장), 김용집 시의원(남구청장), 김동찬 시의원(북구청장), 김학실 시의원(광산구청장), 김이건 전 광주시 대변인(서구청장) 등 6명이다.

이들 출마 예정자는 자신의 출마 예정지역에 명당 선거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선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동찬·김용집·황현택 시의원은 이미 선거 사무실을 마련한 뒤 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담금질을 하고 있다.

나머지 장재성·김학실 시의원은 현재 선거 사무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선거 사무실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홍보전에 해당하는 만큼 위치 선정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들이 선호하는 위치는 대로변 사거리에 유동인구가 많은 코너다. 선거 사무실 마련 비용도 만

만치 않다. 적게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80만원, 많게는 1억원에 500만원 수준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실은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 설치 가능하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의 경우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준비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를 마치고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어 매 선거 때마다 선거 사무소 위치에 대한 선점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A 시의원은 “목 좋은 자리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게 지역민 한 명이라도 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당선자를 배출한 자리라면 그 누구라도 그 장소를 선택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목 좋은 선거 사무실을 찾는 예비 후보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B 시의원은 “후추 예비 후보자들이 늘게 되면 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만큼 선거 사무소 찾기를 서두르는 것”이라며 “내년에 단체장을 비롯해 시의원·구의원 출마 예정자들도 있는데, 갈수록 선거 사무실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오후 나주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하며 나주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김지사 “나주를 에너지수도로”

### 도민과의 대화...한전공대 중심 기업·연구소 유치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특수대학으로 이를 중심으로 기업·연구소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도와 나주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에너지공대를 정장 개교하고 호남권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국가 대형 연구시설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나서 나주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총사업비 440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나주 공산면에 건립 중인 ‘남도병 역사박물관’과 관련, 그는 “대한민국 의병을 대표하고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명품 박물관으로 짓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교육청과 연계해 수학여행단, 군인, 공무원 등 단체 관광객 유치와 의병 관련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기자

김 지사는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구축 사업에 대해 “최근 국가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비수도권 광역철도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나주시와 함께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시가 건의한 대호동 대호수변공원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 김 지사는 “기존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수변생태공원, 둘레길, 쉼터 등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는 김영록 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최명수 도의원, 김영덕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남도·나주시 간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채성근 나주시 시민소통위원장, 오선중 공산면 이장협의회장 등 시민 150여명은 온라인으로 증명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논란은 행정 미숙 탓”

### 이경호 시의원 “결국 市 책임...경관 등 기준 마련해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 논란과 관련, 광주시의 미숙한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 북구2)은 6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중앙공원 1지구는 사업 제안 당시부터 민간사업자 방식에만 의존하며 고분양가 프레임으로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며 “미흡하고 안일한 행정의 우선 사업자 변경 논란, 사업자 특혜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네 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안과 다섯 차례의 사업조정 협의회를 거친 결과가 시민의 공감대와는 거리가 먼 사업자 위주로 최종 결정된 것은 결국 사업자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와 민간 공원 아파트 높이·경관 문제를 제기한 뒤 향후 구체적인 도시계획 제도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행기자

## 국힘 전남도당, 내년 지방선거 후보 쏟아낸다

### 김화진 도당위원장 “광역단체장 의무 출마”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내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 당 소속 후보자 전원을 낼 전망이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6일 전남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 도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는 후보자 전원 출마시키겠다”며 “광역단체장은 도당위원장이 의무적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중량감 있는 인물이 출마할 경우 도당위원장과 경선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일부 당협위원장에서 중에는 기초단체장 출마도 계획한 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월9일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선 “도당 호남 지지율 목표는 30%지만, 15% 이상의 지지율만 나와도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당



인식도 바뀌어서 당초 10% 지지율이 목표였던 호남에서 15% 이상을 바라볼 정도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또 도내 당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이 800-1천명 정도였다”며 “9월말 기준 책임 당원이 4천명 정도 늘었다. 지금도 하루 평균 100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남지역 대선 공약은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같은 국민의 입장으로 전남도의 발전과 일자리, 미래 먹거리 찾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지만 해상 풍력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후성기자